

2021년 7월 반부패·청렴 퀴즈 정답 및 해설

Q 1 (○)

- 부서장이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가에서 휴식 중이던 부서원에게 “술을 마셨는데 태우러 오라”고 하여 부서장의 차를 대리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

(해설) 갑질 유형 중 [사적 이익 요구]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해당 부서장은 ‘근신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2020. 8월)

Q 2 (○)

- 선물제공자와 공직자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해당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해설) 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요건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비로소 공직자와 금품제공자가 알게 된 관계인 경우이거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3 (○)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전에는 개인적 친분 없는 사이였다가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관계의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해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A가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B을 만나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한 사건에서, 고소인A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경찰관B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만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6과20 결정)

Q 4 (○)

- 수수 금지 선물을 반환할 때,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수수 금지 선물 반환 시,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소속기관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 (×)

- 공무원이 신문, 방송을 통하여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고 있으므로(『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3조), 신문·방송의 경조사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6 (×)

- 공무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7 (×)

-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설) 물품의 판매 등 홍보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밝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8 (×)

- 공직자가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된다.

(해설)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9 (○)

-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10 (×)

- 공직자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수입도 외부강의 신고 시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직접적인 강사로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